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6월 윤리적 기업가정신

2026 June | vol.162





Brief

- 1 기술 혁신과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의사결정 중요성 확대
- 2 권익위,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CP·교육·컨설팅·입법 지원 강화
- 3 OECD, 환경 목표와 사회적 영향을 통합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경영 권고, 탄소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공급망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정한 전환의 핵심 요소로 제시
- 4 오스테드, 장기 비전과 이해관계자 협력을 바탕으로 화석연료 기업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전환
- 5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 6 영국, 임원 부패사기 행위에 대한 기업 형사책임 확대...컴플라이언스 책임 강화

01	특별 인터뷰	04
	윤리경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정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hr/>		
02	윤리 체크리스트	08
	혁신과 전환의 시대,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 Just Transition(2026)	
<hr/>		
03	사례 돋보기	11
	사업 전환을 이끈 책임 있는 의사결정 오스테드(Orsted)	
<hr/>		
04	윤리, 지금	14
	권익위 동향 - 청탁금지법 10주년 맞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군부대 납품 비리 적발 -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관·기업 선정 - 청렴윤리경영 지원 법안 국회 제출 국내외 동향 -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 보상 강화 - 영국, 기업 형사책임 확대... 임원 부패·사기도 기업 책임 - 미국,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에 추가 관세 추진 - 기업호감도 역대 최고...윤리경영은 과제	
<hr/>		
05	윤리 네컷	18
	친절, 어디까지 괜찮을까?	
<hr/>		
06	행사	19



윤리경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정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 일 연

- 청렴윤리경영은 AI·디지털 전환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수준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윤리경영 요구 확대
- 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CP·교육·컨설팅·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

Q1. 위원장님께서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특별 인터뷰

윤리경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정책

청렴한 윤리경영이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인터뷰 핵심 3가지

1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2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 상승에 따른
윤리경영 요구 확대

3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지원정책

1

정보 제공·포상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제공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2

CP 운영 지원

• CP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3

교육·세미나 지원

• ESG·AI 윤리 등 교육 제공
 • 담당자 세미나·워크숍 운영

4

법·제도 기반 강화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진단체계 및 표준 마련

AI 시대로의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경영환경도 전례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중심의 변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시선은 기술 그 이상의 “윤리성과 투명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이 소비자에게 진정한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커져 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기업은 윤리경영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영국, EU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반부패 규범이 점차 강화되고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등 ESG 경영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 등 윤리경영 수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게 청렴윤리경영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우리나라는 182개국 중 31위) 결과를 보면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국내 경영환경의 투명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업의 윤리경영을 견인하는 노력은 국가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2. 최근 기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변화가 기업과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이자 성장전략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업 관련 논란들을 살펴보면, 법률적인 위반이 없더라도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기대치를 벗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국민적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고 이에 청렴윤리경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최소한의 준법경영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윤리적 잣대에 부합하는가,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등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사회적 기대치에 상응하는 응답을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렴윤리경영”은 필수 경영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청렴수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렴윤리경영 확산과 지원 정책”을 선정하였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점 추진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간하여 윤리경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윤경포럼과 협업하여 윤리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을 하는 등 기업이 윤리경영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윤리경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기업 10개 기관, 공기업

10개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진단, 사업대상별 진단 보고서 제공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교육 지원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여 ESG 동향, 윤리경영 제도,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분기별로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AI 윤리·준법감시 등 윤리경영 관련 각종 최신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윤리경영 정책 추진의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기업 등에 권고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지원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하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진단 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시범 진단을 거쳐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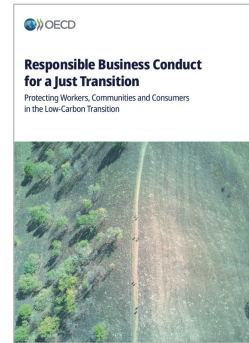
윤리경영의 실천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권익위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지원군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전환의 시대,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 Just Transition (2026)

- OECD는 환경 목표와 사회적 영향을 별개의 과제가 아닌 하나의 경영 과제로 통합 관리할 것을 권고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공급망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정한 전환의 핵심 요소로 제시
- 사업 전환·철수 과정에서 고용·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 권고

혁신과 전환의 시대,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OECD는 2026년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 Just Transition'을 발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지역사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책임 있는 기업행동 실사 가이드언스를 바탕으로 환경적 목표 달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많은 기업이 공정한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행 수준은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분석 대상 399개 기업 중 공정한 전환을 부분적으로라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했으며, 이를 완전히 이행한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사회적 영향을 핵심 경영 리스크가 아닌 평판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과 조직 내 부서 간 목표·역할의 불일치를 지적한다.

이에 OECD는 환경 목표와 사회적 영향을 별개의 과제가 아닌 하나의 경영 과제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내 협력(alignment)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영진은 환경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함께 관리하고 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OECD는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혁신과 전환의 시대,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 Just Transition (2026)

OECD가 발견한 문제

<p>공정한 전환 계획 수립 기업</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6%</p> <p>에 불과</p> <p style="font-size: 10px;">분석 대상 399개 기업 중 공정한 전환을 부분적으로라도 계획한 기업은 6%에 불과하며, 완전한 이행 기업은 확인되지 않음</p>	<p>지역사회 협의·동의 확보 기업</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150개 중 2개</p> <p style="font-size: 10px;">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했다고 밝힌 기업은 150개 기업 중 단 2개</p>	<p>환경과 사회 영향 통합 관리 미흡</p>  <p style="font-size: 10px;">대부분의 기업이 환경 목표와 사회적 영향을 별개의 과제로 관리하는 경향이 지속</p>
---	--	---

OECD의 핵심 제안

 <p style="font-size: 8px;">환경 목표와 사회적 영향을 하나의 경영 과제로 통합 관리</p>	 <p style="font-size: 8px;">노동자·지역사회·공급망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게 소통</p>	 <p style="font-size: 8px;">전환 과정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 체계 마련</p>	 <p style="font-size: 8px;">공급망 전반에 책임 있는 경영 원칙을 확산하고 역량 강화 지원</p>	 <p style="font-size: 8px;">정기적 실사와 공개를 통해 책임 이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p>
--	--	---	---	---

기대 효과

 <p style="font-size: 8px;">전환 리스크 감소 사회·환경 리스크 예방 및 회복력 강화</p>	 <p style="font-size: 8px;">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정거적 신뢰 구축</p>	 <p style="font-size: 8px;">지속가능한 성장 장기적 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p>	 <p style="font-size: 8px;">공급망 경쟁력 강화 협력사 역량 향상으로 탄소전환 대응력 제고</p>
--	---	---	---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150개 기업 중 단 2곳에 불과했다. OECD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실제로 반응하는 지속적이고 양방향적인 과정으로 정의하며, 특히 취약 계층이나 소외된 집단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업 철수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용·지역경제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규모 감원이나 사업장 폐쇄 시에는 근로자 대표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영향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오른쪽은 OECD가 제시한 책임 있는 기업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다. 이를 통해 기업 혁신 및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참고

•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 Just Transition (2026)

〈책임 있는 기업행동 원칙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사업 전환 전략 수립 시 노동자·협력사·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 변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역사회·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전환 과정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전환의 성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중소협력사·지역사회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급망 전반에 책임 있는 경영 원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 철수나 조직 개편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사례 돋보기

사업 전환을 이끈 책임 있는 의사결정

사례기업 : 오스테드(Orsted)

핵심 키워드 #윤리적기업가정신 #책임있는의사결정
#장기주의경영 #에너지전환

-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화석연료 중심 사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이해관계자 협력과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을 전환 성공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제시
- 윤리·준법·인권·공급망 관리 등을 포함한 책임경영 체계를 의사결정 전반에 통합



오스테드(Orsted)

오스테드(Orsted)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해상 풍력·육상풍력·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의 전신인 DONG Energy는 석유·가스 개발과 화력발전을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08년 당시 발전 및 열 생산의 약 85%가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었다. 2009년 오스테드는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사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해상풍력 중심의 투자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본 배분 등을 진행하였다.

오스테드는 백서 ‘Our Green Business Transformation: What We Did and Lessons Learned’를 통해 사업 전환 과정을 정리하였다. 회사는 사업 전환을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닌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해상풍력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조직 및 사업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전환 전략을 기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였다.

백서에서는 전환의 주요 원칙으로 ‘현실 기반 진단(Confront your reality)’, 지속가능한 비전 수립(Build a sustainable vision), 이해관계자 협력(Stakeholder Alignment), 실행 중심의 변화 추진(Drive Tangible Action) 등을 제시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협력을 전환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하며, 직원, 투자자, 정부 및 규제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CASE STUDY

오스테드 (Orsted)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윤리적 기업가정신

#윤리적기업가정신
#책임있는사결정
#장기주의경영
#에너지전환

**과거
화석연료 중심 기업**
(2008년)
발전 및 열 생산의
약 85%가 화석연료 기반

→

**현재
재생에너지 선도 기업**
해상풍력·육상풍력·태양광 중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실현

**전환 시작
2009년**

주요 시사점 3가지

1 장기 비전 기반의
사업구조 전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해상풍력 중심으로 투자 전환, 사업 포트폴리오와 자본 배분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2 이해관계자 협력과
공감대 형성

직원·투자자·정부·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 공유

3 책임경영 체계로
지속가능성 내재화

윤리·준법, 인권, 책임 있는 공급망, 조세 책임, 내부 신고제도 등을 포함한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전반에 통합

오스테드의 전환 원칙

현실 기반 진단
변화의 필요성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

지속가능한 비전 수립
장기적 관점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이해관계자 협력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

실행 중심의 변화 추진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오스테드는 전환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추진하였다. 오스테드는 백서를 통해 이러한 사업 전환 과정에서 얻은 주요 교훈을 정리하였으며,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오른쪽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스테드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기업행동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윤리·준법, 인권, 책임 있는 공급망, 조세 책임, 내부 신고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아래 관리하고 있다.

참고

- Orsted, Annual Report 2025
- Orsted, Governance & Responsible Business
- Orsted, Our Green Business Transformation: What We Did and Lessons Learned(2021.4)

〈Orsted가 녹색 전환을 통해 얻은 7가지 교훈〉

핵심 교훈	주요 내용
1. 현실을 직시하라 (Confront your reality)	기존 사업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 변화와 미래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
2. 지속가능한 비전을 수립하라 (Build a sustainable vision)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 방향 설정
3.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라 (Align stakeholders)	직원,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등과 전환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 확보
4.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Drive tangible action)	비전에 그치지 않고 투자, 조직,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실제 실행 추진
5. 역량을 구축하라 (Build capabilities)	새로운 사업모델에 필요한 인재와 조직 역량 확보
6. 파트너십을 활용하라 (Partner for success)	정부, 산업계, 공급망 등과 협력하여 전환 추진
7. 변화를 지속하라 (Sustain the transformation)	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체계 구축

출처 : Orsted, Our Green Business Transformation: What We Did and Lessons Learned



권익위 활동

청탁금지법 10주년 맞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부터 29일 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교육·행정·언론 등 분야별 영향,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주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15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537

군부대 납품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전기설비를 실제로는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으로 대체해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경찰청·조달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표본으로 점검한 군부대 납품 계약 80건 모두에서 부정 납품이 확인됐으며, 해당 업체의 전체 군 납품 규모는 58개 부대, 약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위는 일부 군부대가 우수 조달물품 설치 여부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고, 설계 단계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처벌과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 검수 강화와 특정 제품 지정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9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137

권익위 정책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관·기업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지원사업’ 참여 기관·기업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0곳과 네이버, 롯데홈쇼핑, 남양유업 등 민간기업 10곳으로, 각 기관과 기업은 부패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프로그램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6월 중 공공·민간 부문별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과 평가 지표 등을 안내하고, 기관·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와 부패위험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12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399

청렴윤리경영 지원 법안 국회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청렴도와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지원·협력 기능 신설, 기업과 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제도 운영에 대한 진단·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부패방지 전담조직의 독립적 운영 기반 강화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렴경영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8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050



반부패 정책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 보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최대 30억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1천억 원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총수 일가 지원 의도, 내부 지시 정황 등도 포상금 산정 대상 증거로 인정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은밀한 담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SBSbiz 2026년 5월 23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312049?division=NAVER>

영국, 기업 형사책임 확대... 임원 부패·사기도 기업 책임

영국의 ‘범죄 및 치안법(Crime and Policing Act 2026)’이 4월 29일 국왕 재가를 받아 제정됐다. 새 법은 기업의 형사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고위 임원(senior manager)이 권한 범위 내에서 사기·뇌물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기업도 직접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경제범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업 책임 원칙이 모든 형사범죄로 확대되면서, 기업은 고위 경영진의 부패·뇌물수수·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들은 반부패·반사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경영진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Osborneclarke 2026년 5월 2일
<https://www.osborneclarke.com/insights/regulatory-outlook-may-2026-bribery-fraud-anti-money-laundering>

ESG/윤리경영

미국,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에 추가 관세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지역의 수입품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12.5%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함께 받고 있어 추가 무역 규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기존에 합의된 15% 수준 이상의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한경비즈니스 2026년 6월 4일
<https://naver.me/5Hy2N2gc>

기업호감도 역대 최고...윤리경영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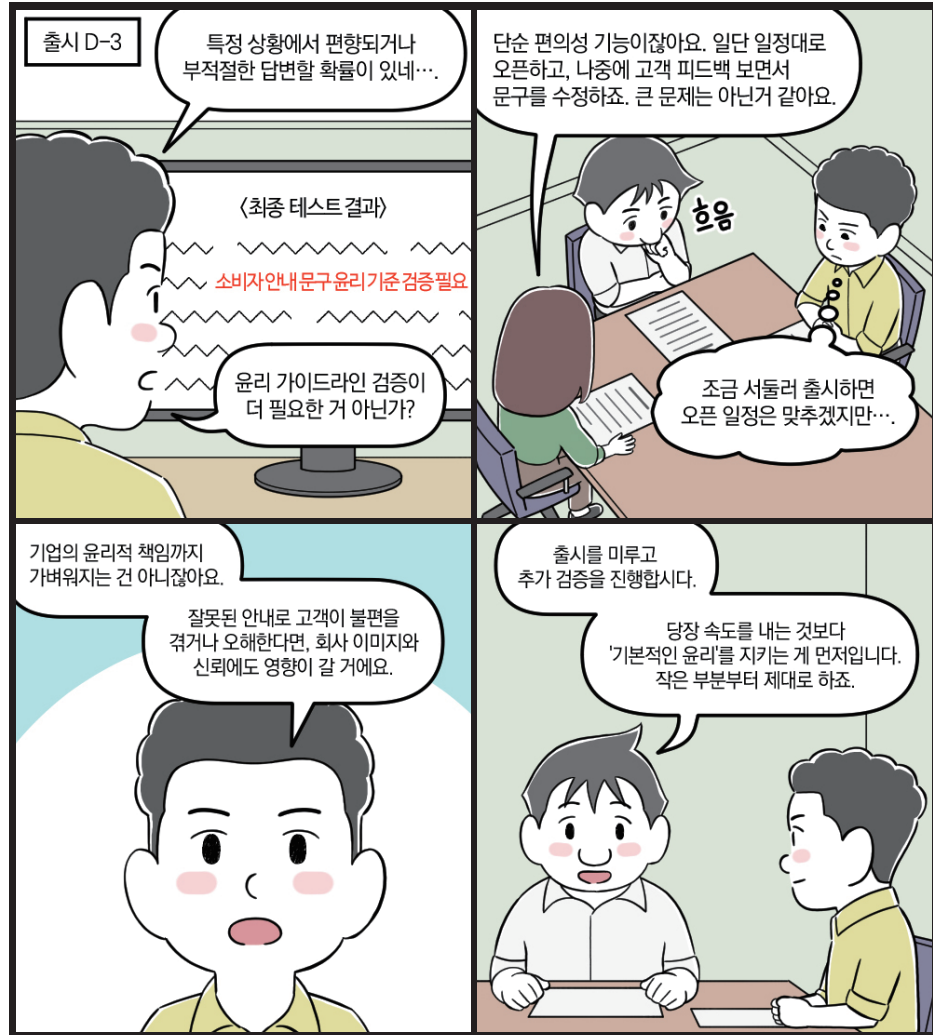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는 60.1점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제 기여(45.8%)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제품·서비스 만족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윤리경영 점수는 47.1점으로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6%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3.5%는 현재보다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3%가 제품 구매 시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혀,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소비자 신뢰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매일경제 2026년 6월 17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12076187>



친절, 어디까지 관철을까?





행사소식

2026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세미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며 우리기업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임있는 AI'와 '인권·노동 리스크 관리' 분야를 다루는 세미나

- 주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 주최 산업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UNGC
- 일정 2026년 7월 14일(화)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참고 <https://koreancp.kr/news/schedule.php?boardid=schedule&mode=view&idx=87>

High-Level Political Forum 2026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물·에너지·혁신·도시·국제협력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회의

- 주관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 일정 2026년 7월 15일(수)
- 장소 뉴욕
- 참고 <https://hlpf.un.org/2026>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6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2026년 7월 9일(목)까지

- (1) '의견남기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프트콘 추첨에 선정되신 분들은

주○진님, 김○민님, 황○연님, 김○웅님, 박○숙님 입니다.



질의 응답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